

정부는 산업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1. 관련 기사

□ 8.11.(화) 조선일보, “李 지시에도…노란봉투법 시행령 안 만든 노동부”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기준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시행령 신설보다 기존의 해석 지침을 보강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 노동부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지시 이후 시행령에 관련 조문을 넣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에 ... 위임 조항이 없는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해석 지침은 시행령과 달리 대외적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노동부가 사례와 판단 기준을 아무리 세밀하게 제시해도 노사가 지침과 다른 해석을 주장하면 결국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거쳐야 한다.

2. 설명 내용

- 최근 AI 등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 결정, 경영성과급 등이 새로운 노사간 교섭 이슈로 부각되어,
 - 노동쟁의 대상 관련 산업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
- 우리부는 산업현장의 노사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통령 말씀 취지가 현장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책임자	과 장	강승헌 (044-202-7611)
		담당자	사무관	서관범 (044-202-7609)

